

광주권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다시 찾는다

입지선정위 심의, 시-구 회의 거쳐 공모...오늘부터 접수

300m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선정 자치구 500억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위장전입 등 논란에 휩싸인 광주권역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를 다시 찾는다.

광주특별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후보지 4차 모집을 14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한다.

앞서 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산구 삼

거동의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되면서 후보지 자격이 취소돼, 입지 선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특별시는 지난 2023년 2차례 공모에서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2024년 3차 공모에서는 자치구별로 1곳 이상씩 후보지를 신청하도록해

삼거동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위장 전입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존 선정 절차는 취소됐다.

광주특별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에 앞서 지난 6일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7일 특별시-자치구 회의를 거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이 타당하다고 의결했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650t 규모로 조성되며, 대상 지역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이다.

응모요건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면적의 60% 이상 및 토지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동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접수된 부지에 대해 입지여건, 법규 적합 여부, 응모요건 등을

검토·확인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법적 지원과 특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적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주민지원자금 조성 등이며,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

별지원금이 교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과자원시설팀 (062-613-16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입 급지에 따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지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13일 ㈜광림과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영광 160MW 해상풍력 공동개발

(주)광림과 업무협약...20MW급 국산 터빈 국가 실증사업 유치

전남개발공사가 영광에서 추진되는 16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20MW급 국산 해상풍력 터빈의 국가 실증사업 유치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전남개발공사는 13일 ㈜광림과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광림이 추진 중인 160MW 규모의 ‘영광의 미래’ 해상풍

력 발전사업을 공동 개발한다. 발전사업과 연계해 20MW급 국산 해상풍력 터빈의 기술개발과 국가 실증사업 유치도 함께 준비한다.

두 기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과 실증사업 추진 △계통연계·송배전 설비 등 전력 인프라 구축 △풍황·해양환경 등 기술자료 활용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의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20MW

급 국산 해상풍력 터빈 기술개발·실증계획과 연계해 사업 대상지의 입지와 계통연계,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 실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산 해상풍력 터빈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상용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비롯한 에너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기관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완도 400MW와 신안 323MW 등 총

727.3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4.3MW 규모로, 지방공기업이 추진한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2025년 상업발전을 시작해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확보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공동개발과 20MW급 국산 해상풍력 터빈 국가 실증사업 유치를 함께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국내 해상풍력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농업용수 가뭄대책비 55억 긴급 투입

민형배 시장, 정부 지원 건의 결과 특고세 45억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속되는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원 등 총 55억 원을 확보해 시군에 긴급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뭄대책비는 지역별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공급 여건에 따라 양수기·송수호스 등 긴급 급수장비 구입·임차, 관정과 간이양수장 등 추가 용수원 개발, 하천수 양수와 하상 굴착, 용수로 직접 급수, 저수지 불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와 긴급 급수에 집중 투입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그동안 가뭄 상황판단회의와 현장점검으로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해 현장 대응을 추진해 왔다.

민형배 시장은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으며, 중앙부처에도 지역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확보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가뭄 취약지역은 현장조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가뭄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미리 판단하고 필요한 용수와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뭄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방직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아냐”

황기연 부시장 “절차 문제없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각각의 분장부서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철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 부시장은 “현재 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당시 옛 전남도와 광주시

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며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해 공모 분야와 조례상 명칭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해 정비한 뒤 부시장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14일 민 시장과 공무원 등 6명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민 시장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제,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방정부 수의계약, 동일업체 횡수·금액제한

앞으로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횡수와 금액에 제한이 생긴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위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공공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13일 내놴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세종과 제주도 기초 지방정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